



[뉴스] 1인가구·맞벌이 등 소득기준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02



Economy

코스피	3254.42 (0.00)	코스닥	1055.50 (0.00)
금리 (연이자율)	1.393 (-0.004)	환율 (원/달러)	1150.80 (+0.90) (23일)

또 파운드리 분사설... 삼성, 멈춘 투자시계 돌아갈까

TSMC·인텔 등 점유 확대 위기감 오너 공백에 美 투자 협상도 난항

삼성전자 “사실 무근” 입장에도 수년 간 증권가서 분사 소문 돌아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도 허무맹랑한 내용이지만,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미국 현지 생산라인 중요성도 새삼 강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 등에는 출처 불명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 소문이 돌았다. 삼성 파운드리가 삼성디스플레이 LCD 사업과 함께 독립회사로

설립되고, 삼성디스플레이 OLED 사업은 삼성전자로 흡수된다는 내용이다.

삼성 파운드리 분사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반도체 설계 사업과도 함께 운영되는 탓에 고객사들이 믿고 수주하기 어렵다는 비판 때문에 지난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물론 이번에도 사실 무근이다. LCD 라인을 파운드리 사업에서 임대한 사실이 와전됐다는 추측이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애플 등 여러 업체에 납품 중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분사된지 10년도 안돼 다시 삼성전자로 합병될 가능성도 없다는 평가다.

파운드리사업부 입장에서도 아직 분사될만한 역량을 가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을 따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스템 LSI 차원에서 이미 센서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파운드리가 전폭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캐시카우’인 메모리 사업과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와는 달리 파운드리에 투자를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파운드리



한국 여자 양궁 ‘9연패 신기록’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안산, 장민희, 강채영이 25일 오후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와 메모리 부문이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물리적으로도 분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파운드리 라인이 메모리와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은 만큼, 분사를 위해 막대한 라인 구축 등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파운드리 분사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위기감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TSMC가 여전히 절반 이상 점유율을 지키며 ‘반도체 비전2030’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인텔까지 ‘IDM

2.0’을 내걸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설까지 돌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 투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사업적으로는 메모리와 함께해 자금 융통과 기술 시너지를 모두 누리면서도, 실제 생산은 고객사들과 가까운 독립된 곳에서 진행해 신뢰도까지 모두 충족하는 방법이다. 오스틴 팹이 오랫동안 14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미국에 최첨

단 팹을 증설하면 현지 주요 팹리스 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착공은 묘연한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일찌감치 투자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협상력을 뺀 긴타에 아직 투자처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오스틴 공장 증설이 유력하긴 하지만, 여전히 협상이 순탄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금융시장 부실위험 경고등 2題

‘108조 시한폭탄’ 대출·이자 또 상환유예?

코로나 재확산에 연장 불가피 금리인상기 연쇄적 부실 우려

(5대은행 코로나 관련 여신지원실적) (단위: 억원)

	대출만기 연장	분할납부·이자유예	총액
2월 17일	732000	64000	797000
6월 22일	998,000	85000	1082000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중기,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에서는 만기조치가 연장될 경우 누적부실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점진적 상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당장 종료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종료일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확산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됐다. 사실상 오는 9월까지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개연성이 커진 만큼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대출상환 유예보다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속된 대출상환 유예조치로 은행권의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릴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여신지원실적에 따르면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99조7914억원(41만5525건)이다. 여기에 기업의 분할 납부액 8조4129억원(1만4949건)도 미뤄졌고, 같은 기간 이자 549억원(4793건) 납부도 유예된 상태다.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가 108조 2592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1년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대출연장과 관련한 신용도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당장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매달 원리금 이자 상환 등을 확인하며 부실 등을 체크하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금리인상시기와 맞물릴 경우 연쇄적으로 부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저축은행, 기업대출 50조... 26% ↑

기업부실 댄 제2금융권도 타격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쏠린 기업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부실로 이어져 2금융권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금은 총 49조7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39조3242억원 대비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7조3624억원, 약 95%가 중소기업대출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캐피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0일 ‘2021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에서 캐피탈사의 기업대출 규모 증가에 따른 부실화를 우려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2016년 시중 32개 캐피탈사의 포트폴리오에서 16%를 차지했던 기업대출이 올해 1분기 20%로 확대됐다. 기업대출은 상대적

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위험 수준이 높고 건당 평균잔액이 많아 한 건이라도 부실화될 경우 대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신평은 특히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대출만기·이자 유예 등) 일몰 이후 중소기업,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종료 시점에서 자산부실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대출자산 부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좁비기업)’이 전체의 39.7%로 전년 대비 4.6%포인트 늘었다.

/권소원 기자 think@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동연 “새 세력이 판 바뀌어 대한민국 진전... 민주·국힘 다 문제 있다”
▲ 윤석열 “文, 여론조작 유일한 수혜자... 남의 일처럼 행동” /사진 뉴시스

▲ 이재명 “경선 아름답고 무한경쟁 하되 흑색선전 방식 안된다”
▲ 文정부 후자치비서관 3명, 이재명 캠프 합류



▲ 다음달 원전 추가 투입 전망... 올여름 전력대란 위기 넘기나 /사진 뉴시스
▲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소상공인 어려움 가중”